

조국 “조두순 청원자 분노에 공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6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며 “헌법상 출소 이후 조두순을 격리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고 부대변인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이해된다”며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번 청원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범무

국민청원 생방송 공식 답변해 “재심은 불가능”

“주취감형 규정無…감정규정 삭제 논의 신중”

“국민 뜻 중요…정부·사법부 신중하게 될 것”

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의 대책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긴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 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취감형 폐지’ 정원에 대해

서도 답변했다.

조 수석은 “헌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정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명시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과 제2조(작량감경)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개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런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라며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최저 형량 5년의 살인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술마시고 싸워서 상해나 폭력으로 입건된 경우는 사실 흔한 사건인데 무조건 엄벌해야 하느냐 합의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게 인정됐지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2009년 수감된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청원자는 주장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61만3354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청원이다. 지난달 4일에 제기돼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조 수석은 앞서 소년법 폐지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2가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고 이날 27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국종 이주대 교수의 어려움을 계기로 제기된 중증 의사환자의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권역의 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남았다.

뉴스스



여야, 예산안 줄다리기사 민주당 우원식 ‘판정승’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겼다는 평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주체로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었다는 당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관철했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시행시기를 다소 늦췄을 뿐 사실상 정부안대로 인용됐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 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했지만, 28%의 최고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애초 ‘초대기업 증세’라는 취지를 살렸다.

새정부 예산안 명분·실리 지켜…’與 승자’ 평가
文 대통령, 우원식에 전화 걸어 “수고하셨다” 격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2조97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음에도 합의문에서는 향후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인 1만221명에서 2746명을 축소된 9475명에 합의했다. 애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연평균 공무원 총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만큼, 약 2500명의 ‘공무원 순증’이라는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가 공무원 증원 규모를 4500명에서 2875명으로 약 36% 삭감된 데 반해 이번에는 22% 삭감으로 폭을 좁혔다.

이동수당 도입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전원 지급하기로 한 데서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원키로 수정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가 의원총회 과정에

서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깨졌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다수는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번 협상에서 여당이 판정승을 거둔 데는 원내지도부의 협상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우산 여당이 제시하는 의제대로 협상이 진행됐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맞닿은 사안이였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주제는 없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야당이었던 작년의 경우 예산안에 없었던 누리

과정을 관철했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제기한 의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제시한 프레임에서 줄이고 조정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을 설득해 한국당을 압박한 것도 협상 결과를 내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협상이 타결된 4일 오전 우 원내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과 개혁을 고려로 한 국민의당의 협력을 끌어냈고,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힘을 발휘하려던 한국당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지속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협상 타결 직후 우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저녁식사 자리를 갖고 화기에어 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노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직 사퇴…“의원직 상실, 통합 전제 아니길”

“실천이념의 중도정치 힘 얻도록 돕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최고위원직 유지와 관련해 “충지 않은 상실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로서는 억울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주도했던 최 전 의원은 “끊임없이 의견을 넓히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정당은 소멸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를 보고 과감하게 변신할 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그러면서 “갑작스

러운 선고일 지경과 판결이 우리당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라도 최우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문제해결, 실천이념의 중도정치가 힘을 얻도록 돕겠다”며 “이번주 내내 우리 영광을 떠나는 미국 폭격기의 의미는 뭘지, 사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국민의 신뢰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